

부산금융중심지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The Busan Financial Center: Evaluation and Future Direction

이호선

부산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Ho-Sun Lee(ahmlhs@hanmail.net)

요약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중심지정책과 부산금융중심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앞으로 부산금융중심지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정부의 금융중심지정책은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아직 시작단계인 부산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한 정책들은 많지 않았으며, 지자체 수준에서의 정책에 더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확대나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업들의 부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유치기업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 필요성이 있으며, 규제프리존이나 규제샌드박스과 같은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과 부산시의 문현-북항 금융자유지역 및 핀테크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된다면 부산금융중심지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중심어 : 부산금융중심지 | 평가 | 인센티브 강화 | 규제프리존 | 규제샌드박스 |

Abstract

In this paper, I evaluate national and regional policies for financial centers and Busan Financial Center and find the way of the future development of Busan Financial Center. And I found that national policies for financial centers was focused on general improvements of financial industry, so a little tasks for Busan Financial Centers were listed. Therefore I suggest that central government should have more national policies for enhancing Busan Financial Center and promoting participation of private financial firms.

And I propose the broader incentive schemes for financial firms moving to Busan, and expect that combining national deregulation policies like Regulation-Free Zone and Regulatory Sandbox and Moonhyun-North Port financial free zone and FinTech cluster plans of Busan will make a big progress of Busan Financial Center.

■ keyword : | Busan Financial Center | Evaluation | Improving Incentives | Regulation Free Zone | Regulatory Sandbox |

* 본 연구는 2014년도 부산가톨릭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접수일자 : 2016년 06월 20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8월 11일

수정일자 : 2016년 07월 26일

교신저자 : 이호선, e-mail : ahmlhs@hanmail.net

I. 서론

2009년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동이 금융중심지로 선정된 지도 꽤 시간이 지났다. 1987년 정부에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금융중심지 조성 계획을 시사한 이후[1], 2003년 참여정부 들어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을 국정과제로 확정하였고[2], 2009년 서울과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선정되었다. 이후 부산에는 문현동을 중심으로 한 금융혁신지구가 지정되었고, 60층 규모의 부산 국제금융센터가 건설되어 2014년 완공되었으며, 그와 함께 금융관련 공공기관들의 부산이전 및 입주가 완료되었다. 문현금융단지에는 부산국제금융센터 외에도 부산은행 본점, 한국은행 부산본부, 기술신용보증기금 본점이 위치하여 외견상 금융중심지로서의 면모는 어느 정도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부산금융중심지의 추진결과 영국 Z/Yen사에서 발표하는 세계금융중심지지수(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세계금융센터지수로 번역하기도 함)에서 부산이 평가에 포함되고, 2015년 3월의 GFCI17에서는 평가대상 80여개 금융중심지 중 24위에 위치한 것으로 평가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금융중심지 유치가 부산경제에 가시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에 머물러 있다. 특히 금융기관의 부산유치실적이 미비하고, 부산경제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정도가 아직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못하는 등 부산금융중심지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비해 내용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금융중심지 정책 및 부산금융중심지 추진 결과를 평가해보고 부산금융중심지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부산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실행가능한 추진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먼저 II장에서는 부산금융중심지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III장에서는 2014년 10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14~2016)’을 중심으로 국가적 금융중심지 추진 정

책에 대한 부산의 입장에서 본 평가를 다룬다. IV장에서는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부산금융중심지의 세부 사업들과 2015년 4월 22일 발표된 부산시의 ‘부산금융중심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를 중심으로 하여 부산금융중심지 추진에 대한 평가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앞으로의 부산금융중심지 추진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II. 문헌연구

부산금융중심지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이종필(2011)[1]은 전략분야인 해양·과성금융에서의 단계적 추진전략으로 국내 주요 금융기관의 선박금융부서를 단계적으로 유지하는 전략 및 기술파트에서 시작하여 지점 확대, 금융파트 순으로 이전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한편 최진배, 윤창준(2011)[3]은 금융중심지 도약을 위해서는 부산지역 금융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은행 및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부산지역본부의 설치 및 지위격상을 통해 기업신용심사 전문인력의 유입, 여유자금의 지역에서의 운용 등을 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조용범(2013)[4]은 해외 주요 금융중심지의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현재 부산 금융중심지 추진의 미비점을 정리하고 향후 과제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주요 미비점으로는 정부의 정책노력 부족, 제한적인 경제적 인센티브, 국제금융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미흡, 국제화된 금융인력 양성기관의 부재, 경제적·사회적 리스크 요인, 비즈니스 환경 및 사회 인프라 미흡을 들고 있으며, 향후 과제로는 조세혜택 측면과 비조세 측면에서의 제도개선 및 금융전문인력 양성, 생활지원서비스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부산금융중심지의 3가지 비전 중 백오피스/백업센터 특화금융중심지라는 비전이 상대적으로 소홀함을 지적하는 연구들도 있다. 이연정, 이민환, 윤성민(2010)[5]은 부산지역에 원격지 금융백업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이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김원익, 성순현, 이호선(2014)[6]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백

업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면서 부산금융중심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을 지적하였다.

부산대학교 사회급변현상연구소(2013)[7]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 이후 국내의 금융환경 등의 변화에 따른 부산금융중심지 육성계획 및 세부 추진전략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향후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밖에 이종필(2015a)[8]은 부산금융중심지에 금융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한 여건을 평가하고 다양한 육성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김성태(2015)[9]는 이러한 금융클러스터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또한 자본시장연구원(2015)[10]은 부산금융중심지의 편도산업 특화전략과 금융중심지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들 문헌들에서 살펴보면 부산금융중심지를 통해 부산의 금융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들과 부산금융중심지의 미비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방안들이 제시되어 왔다.

한편 정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국내의 사례분석을 통해 국내 재난관리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한 신동희, 김용문(2015)[11]의 연구나 관광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정책의 역할을 탐색한 김태현, 박숙진(2011)[12],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영화영상 관련기관의 부산 이전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 김진혜(2009)[13]와 같이 다양한 연구방법론들을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평가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부산금융중심지에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부산의 금융중심지정책에 대한 간략한 평가와 함께 부산금융중심지가 실제 실행가능한 향후 추진과제를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III. 금융중심지 정책의 평가

금융위원회(2014)[14]는 2014년 10월 1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14~2016)’을 심의·확정하였다. 여기에서는 향후 3년간의 금융중심지 정책

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는데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통한 금융중심지 위상공고화”를 목표로 국제경쟁력 있는 자본시장 구축과 금융산업의 국제역량 제고, 국제적 수준의 금융인프라 구축 및 금융중심지 활성화 등 4대 분야 추진과제를 수립하였다. 특히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산업과 법률·회계 등 금융연관산업의 집적을 도모하여 국제 경쟁력 있는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고, 주요 글로벌 금융중심지 수준의 경영 인프라 구축으로 매력적인 금융투자 및 경영환경을 조성하며, 외국인 금융투자자와 가족들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들 추진과제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금융중심지 정책 기본방향(2014~2016)

목표	세부 추진과제
국제 경쟁력 있는 자본 시장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대 선도금융산업(자산운용업, 투자은행, 사모펀드, 헤지펀드, 벤처캐피탈) 육성 -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 및 금융혁신 선도: 신종 금융상품 출현 유도 및 한국투자공사와 국내 연기금의 국제 역량 강화 -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시장참여자의 자유로운 영업 토대 마련: 한국거래소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회계공시 등 제반 인프라 개선
금융 산업의 국제 역량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도모: 국내 금융회사의 국제적 금융거래능력 강화와 현장의 숨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은행보험산업의 선진화, 외환시장의 국제경쟁력 강화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금융인프라 수출 등과 연계한 신흥국 진출 확대 및 다각적 지원 방안 마련 - 특화금융의 육성: 선박금융산업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역량 강화
국제적 수준의 금융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인프라 선진화: 바젤Ⅲ, 정리체계 개혁, 지배구조 개선, 자금세탁방지제도 글로벌화 - 금융감독 체계와 금융소비자 보호의 개선 - 글로벌 수준의 전자금융환경 구축 - 금융연관산업 활성화를 통한 원활한 국제 금융거래 지원 - 금융전문인력의 유치와 양성을 통한 국제경쟁력과 전문성 제고
금융중심지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 집적 촉진: 지역별 특화전략으로 시장친화적 금융생태계 조성 - 경영인프라 구축으로 매력적인 금융투자 및 경영환경 조성: 금융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정보 집적, 세제 및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생활환경 개선

출처: 금융위원회

이중 부산금융중심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추진과제는 금융산업의 국제 역량 제고 목표에 따른 특화금융 육성 과제와 금융중심지의 활성화 목표 중 지역별 특화

전략을 통한 시장친화적 금융생태계 조성 과제 및 경영 환경과 생활환경 개선 과제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수립하는 국가적 차원의 금융중심지 정책에 지역 중심지에 대한 정책적 안배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한다.

이에 앞서 한국금융연구원(2013)[15]은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금융중심지 정책의 추진 성과를 짚어보고 추진과제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먼저 한국금융의 비전을 대내외 금융자산 축적을 통한 금융자산국가로의 위상 제고를 통한 금융선진국 도약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창조금융과 금융장조의 투트랙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존 정책 과제의 지속적 추진과정에서 부산금융중심지는 해운물류허브 기능과 한국거대소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양·파생금융에 특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또한 세부 실천과제로는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금융지원 측면에서 창업, 기술, 서비스, 프로젝트 금융의 4가지 창조경제형 금융생태계 유형을 제시하고, 유효경쟁 확대를 위한 금융 관련 법·제도 개선 측면에서 계좌이동제의 도입, 진입장벽의 완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시장의 질적 성장 유도, 금융규제 완화, 금융그룹 중심의 감독·검사체계의 전환, 상호주의에 입각한 국제화 전략 추진, 경영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 창조금융·벤처금융 강화, 10만 금융 전문인력 양성, 금융자산의 글로벌화와 같은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역별 금융중심지에 초점을 맞춘 세부 실천과제는 제시되지 않았다.

위에서 살펴본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및 관련 연구에서는 금융중심지에 국한된 추진과제보다는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변화를 위한 추진과제들이 주가 되고 있어 개별 금융중심지의 발전에 초점을 맞춘 과제들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이는 부산금융중심지의 경우 이들 국가 정책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 금융산업이 서울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왔고, 대다수 금융기업들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현실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변화를 꾀하는 추진과제들은 결국 서울금융중심지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 반면, 이제 시작하고 있는 부산금융중심지에 대하여는 별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부산금융중심지에 대한 보다 직접

적인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방안과 과제들이 제시되어 부산금융중심지의 성장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나 그렇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IV. 부산금융중심지 평가

부산금융중심지에 대해 설정된 비전은 선박금융·파생금융·백오피스/백업센터 특화금융중심지이다(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2012)[16].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설정된 목표는 선박금융의 경우 글로벌시장 점유율 3%, 아시아시장 점유율 12% 내외, 파생금융의 경우 장내거래 세계 1위 유지, 장외거래 동북아 3위 진입, 백오피스/백업센터는 은행·증권·보험 등 주요 금융기관의 금융 백오피스 자회사, 콜센터, 원격지 백업센터를 각 1개 이상 유치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추진과제는 5개 부문 30개 과제로 선박금융 및 수산금융 관련 9개 과제, 파생금융 육성 관련 5개 과제, 백오피스 및 백업센터 관련 2개 과제, 금융중심지 기반조성·활성화 관련 10개 과제, 국내외 금융회사·기업체 유치 관련 4개 과제이다. 이러한 추진체계 하에서 2013년 현재 부산 금융중심지와 관련하여 달성한 가시적 성과로는 문현금융단지 내에 한국은행 부산본부, 기술보증기금이 입주하였고, 부산은행 본사 및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의 완공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이전대상 기관들의 부산 이전도 완료되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청사의 부산 유치는 세종시 설치로 무산되었으며,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 설립도 선박금융지원센터로 축소되어 부산에 설치되었다.

먼저 2012년에 설정된 부산금융중심지에 대한 최초 로드맵에 따른 추진과제들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이러한 추진과제의 선정에 있어 김원익, 성순현, 이호선(2014)[9]은 부산금융중심지의 3대 비전은 세번째인 백오피스/백업센터 특화금융중심지에 대한 소홀함을 지적하면서 금융부문 BCP 수립과 연계하여 부산이 수도권권을 백업하는 금융부문 BCP 중심도시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자본시장연구

표 2. 부산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로드맵[16]

1 단계	금융중심지에 필요한 제반 기반조성 (2010년 ~2012년)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집적을 위한 인프라 조성 - 선박 및 파생금융 기반 조성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제반 여건 조성 - 금융중심지 평판 확립을 위한 국내외 홍보 활동 강화
		주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금융기관 집적을 위한 인프라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조성 - 금융전문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선박금융전문대학원 설립 (한국해양대학교 내 금융 MBA과정) o 국제 선박금융 아카데미 운영(부산시, 국토부, 해양대학교 등) o 부산금융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파생상품전문가, 해상보험전문가, 부산특화금융 아카데미 (나)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제반 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선박금융 세제 지원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한국선박금융공사법 제정 발의 -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 조례 재개정 - 부산광역시세 및 구세 감면조례 개정 (다) 선박 및 파생금융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금융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국내 주요 금융기관의 선박금융부서 부산 이전(수출입은행 등) o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한국선박금융공사) o 선박 운용 회사 설립(한국선박운용(주), 캄보선박운용(주)) o 선물회사 및 백업센터 유치 o 해외 선박금융기관 해외 IR 추진 - 파생금융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파생상품 R&D센터 설립(1실 3팀, 총 20명, 한국거래소 내) o 탄소배출권 거래소 부산 유치(한국거래소) o 파생상품 접속장비(라우터) 부산 설치 o 상품거래소 및 CCP 설립(한국거래소) (라) 금융중심지 평판 확립을 위한 국내외 홍보 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중심지 해외 IR 활동 전개: 매년 상하반기 개최 - 부산국제금융포럼, 한국선박금융포럼, 부산국제금융박람회, 부산 국제탄소금융포럼, FATA/APG 자금세탁방지 국제회의 개최
2 단계	특화금융 및 국제금융 인프라 구축(2013년 ~2016년)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사업 중 미완료 사업 지속 추진 - BIFC 조성 완료 및 금융기관 집적화 추진 - 금융중심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외국금융기관 및 특화(선박 및 파생) 금융기관 유치 - 이전 금융공공기관과 연계된 금융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 국제금융 인프라 구축
		주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1단계 사업 중 미완료 사업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관련 법률 재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조세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한국선박금융공사법 신설 등 - 파생금융 기반 조성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탄소배출권 거래소, 상품거래소, 중앙청산소 유치 또는 설립, 선박금융전문대학원 설립 등 (나) BIFC 조성 완료 및 금융기관 집적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FC 조성 완료: 1단계(2014. 06), 2.3단계(2015. 12), 개별사업(2014. 12) - 금융기관 집적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1단계 사업: 8개 기관 입주(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남부발전,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거래소, 농협은행 부산본부) o 2.3단계: 금융관련 백오피스, 백업센터 입주 o 개별 사업: 3개 금융기관 입주(한국은행, 부산은행, 기술보증) (다) 금융중심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특화 금융기관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금융 기관 유치: 선박금융 부서이전, 선박금융전문기관, 선박운용회사 - 선물회사 유치: 서울지역 61개사 중 36개 본, 지점 유치 (라) 이전 금융공공기관과 연계된 금융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공공기관들의 백오피스 및 백업센터 유치 - 중,소형 금융기관 공동백업센터 설립 방안 추진 - 상품거래소 본격 운영에 따른 현물거래소 집적화 추진 - 탄소배출권 거래소 운영에 따른 환경전문 건설링 업체 유치 마) 국제금융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금융기관 대상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 o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영업 및 진입관련 인허가 및 애로 건의 사항 처리 o 외국인의 업무, 생활환경 관련 정보 제공: 행정사무의 외국어 서비스 등 - 파생상품 R&D센터 활용하여 글로벌 파생금융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해외 거래소(시카고 거래소 등)와 파생상품 개발 공동연구활동 추진 o 세계거래소 연맹 국제회의 유치 등 네트워크 구축 - CCP 설립을 통한 동북아지역 중앙청산소로 업무영역 확대 -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설립 추진 - 부산지역을 동북아의 캡티브보험사의 주요 소재지 거점으로 육성
3 단계	국제적인 선박 파생금융 특화 클러스터 형성(2017년 ~2020년)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중심지 인프라를 활용 외국 금융기관 유치 활성화 - 해양(수산,선박), 파생금융 특화 클러스터 형성 - 부산 금융기관 경쟁력 강화
		주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금융중심지 인프라를 활용 외국 금융기관 유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슬람 금융을 활용한 외화자금 조달 - 동북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유치 (나) 해양(수산,선박) 파생금융 특화 클러스터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선박금융기관의 유치 - 해운비즈니스 클러스터 조성 및 해운기업의 설립 - 수협은행 본사 유치를 통한 수산금융산업 활성화 - 해상보험 상호회사 설립지원 - 기보의 녹색금융 활성화사업 지원 (다) 부산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소재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기능 제고 - 부산국제금융연수원 설립 - 연계형 금융자유지대 구축

원(2015)[13]은 부산금융중심지의 펀드산업 특화전략으로 부산 금융중심지 특화 사모펀드 육성을 위한 정책펀드의 조성, 자산운용 관련 백오피스 업무 특화, 중국 투자자들을 위한 부산과 칭다오의 협력 강화, 부산 금융중심지의 인프라 조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종필(2015b)[17]은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기구의 설립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한편 2015년 4월 22일 부산시는 ‘부산금융중심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추진 과제로는 해양과생특화 중심지 구축을 위하여 해양선박금융을 집중 육성하고, 파생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한국거래소의 역량 강화와 해양전문 재보험사 설립 추진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국제 수준의 금융인프라 구축을 위해 백오피스(Back Office) 분야의 특화모델을 집중 육성하고, 금융권 데이터센터 및 백업센터의 집적화를 꾀하며, 국제 금융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과제들을 제시하였으며, 지역금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전기관의 기능 강화 및 협업모델의 발굴, 기보 등과 연계된 기술평가 전문 도시화의 추진 및 지역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꾀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중심지 기본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 금융중심지의 인프라 구축을 지속 추진하고,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며, 금융회사 종사자의 영업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2014년 취임한 서병수 부산시장의 ‘민선 6기 공약실천 계획’ 및 ‘부산발전 2030 비전과 전략’에도 부산금융중심지와 관련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의 공약실천 계획에는 일자리중심 도시 관련 사업으로 지식형 서비스산업 육성과 글로벌 해양도시 관련 사업으로 해양금융산업의 정착이라는 2개의 중점사업이 부산금융중심지와 관련된 사업이다. 그리고 ‘부산발전 2030 비전과 전략’에서는 문현-북항 금융자유지역의 설치와 기술창업-금융단지 연계형 핀테크 클러스터 조성의 2개 사업이 제시되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부산시의 금융중심지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다양한

과제들을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력을 집중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고 해도 그 정책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특히 금융중심지 정책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와 민간 금융회사들의 움직임이 없이는 성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게다가 부산금융중심지는 기존에 금융산업에 대한 충분한 기반을 가지고 시작한 서울금융중심지와 달리 금융산업에 대한 별다른 기반이 없이 무에서 출발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때 부산시가 내놓은 다양한 추진과제들에 비해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조가 너무 부족하다는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

V. 정책적 제언

본 장에서는 앞서의 정부의 금융중심지 정책과 부산 금융중심지 추진과제들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향후 금융중심지 정책의 추진 및 부산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방안들과 과제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금융중심지로의 유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의 해소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금융중심지와 유사한 특별지구 형태로 경제자유구역을 들 수 있다. 이 두 특별지구가 제공하는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차이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에는 부산금융중심지의 유치기업 인센티브제도를 정리하였는데[18], 이에 따르면 본사나 지점의 신설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본사나 지역본부, 지점의 부산내 이전에 대하여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사업용 설비설치자금과 같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19]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부산금융중심지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지역에 개별형으로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가 5년간 면제되고, 재산세도 지역에 따라 7년 또는 15년간 면제되는 등 부산금융중심지보다 더 높은

표 3. 부산금융중심지의 유치기업인센티브제도[18]

구분	지원대상	세부내용			
		외국: 본사/지역본부 신설 국내: 본사 창업	외국: 지점신설 국내: 지역본부/지점신설	외국: 한국내 본사/지역본부 이전 국내: 본사 이전	외국: 한국내 지점이전 국내: 지역본부/지점 이전
		외국금융기관의 경우 국외 → 부산		(시역외 → 부산)	
법인세, 소득세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해당없음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로부터 3년간 100% 면제		해당없음	
취득세		창업(또는 신설)일로부터 15년 이내 취득재산에 대해 취득세 100% 면제		해당없음	
입지 보조금	외국: 3개국 이상을 관장하는 지역본부 또는 한국본사 국내: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본사	용지·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50% 감면(기관당 50억원 이내)	해당없음	용지·건물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의 50% 감면 (기관당 50억원 이내)	해당없음
고용 보조금	최근 3개월간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금융기관	이전 후 신규고용 1인당 60만원 이하 (최대 6개월, 기관당 2억원 이내)			
교육훈련보조금	내국인 10명 이상을 고용하기 위해 1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금융기관	이전 후 신규고용 교육훈련 1인당 60만원 이하 (최대 6개월, 기관당 2억원 이내)			
사업용 설비설치자금	내국인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금융기관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의 10%이내 (기관당 10억원 이내)			

표 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유치기업인센티브제도[19]

구분	지원대상	세부내용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단지형	개별형	5년형	7년형
국세	외국인투자지역: 100% 외국인단독투자기업 또는 합작기업으로 외국인지분 30%이상 경제자유구역: 100% 외국인단독투자기업 또는 합작기업으로 외국인지분 10%이상	관세 5년간 면제(수입자본재)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면제, 다음 2년간 50%감면	관세, 특소세, 부가세 5년간 면제 법인세, 소득세 5년간 100% 면제, 다음 2년간 50%감면	관세 5년간 면제(수입자본재)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면제, 다음 2년간 50%감면	관세, 특소세, 부가세 5년간 면제 법인세, 소득세 5년간 100% 면제, 다음 2년간 50%감면
재산세	조세감면요건 있음	7년간 100% 면제, 다음 3년간 50% 감면(강서구) 15년간 100% 면제(창원시)			
취득세		15년간 면제			
임대료감면	외국인투자금액, 1일 고용인원, 전체 생산량 중 수출 비중에 따라 임대료 감면 50%, 75%, 100%				
입지보조금/ 용지매입비	입지보조금: 정상 분양가의 50%이내, 10년이상 사업영위(경남지역) 용지매입비: 매입가액의 30% 이내(부산지역)				
고용보조금	- 최대 6월, 1인 100만원 이내(경남지역) - 1인 30~50만원, 최대 2억원(부산지역)				
교육훈련보조금	- 최대 6월, 1인 100만원 이내(경남지역) - 최대 6월, 최대 2억원(부산지역)				
기타	시설보조금: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내 최대 2억원(경남지역) 컨설팅비용지원: 컨설팅비용의 30% 범위, 최대 1~2천만원(부산지역)				

수준의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세제 혜택 및 보조금 지급요건에서도 부산금융중심지와 부산신해경계자유구역 사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해볼 것은 금융기업의 본사 및 지점의 부산 이전에 대하여는 세제혜택이 없고, 지자체 차원의 보조금 정도만 지원이 된다는 점이다. 금융산업의 경우 허가제나 관계금융 등의 이유로 다양한 진입장벽이 있어 신규 진입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산금융중심지에 본사/지역본부/지점을 신설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본사/지역본부/지점을 이전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손쉬운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유치기업 인센티브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이전노력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금융중심지의 유치기업 인센티브제도를 기업신설에만 국한하는 법률이나 제 규정들을 개정하여 기업이전에 대하여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유사 특별지구에서 제공하는 수준 이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자본시장연구원(2015)[13]에서 지적한 현행 금융중심지법의 문제점 중 제한적인 경제적·사회적 지원 문제와도 연결되는 사안으로 이를 위해 금융특구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최근 금융산업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핀테크, 클라우드핀딩과 같은 금융관련 동향에 부산금융중심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호선(2014)[9]은 부산지역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클라우드핀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클라우드핀딩은 부산에서’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이를 부산 경제 활성화까지 이어가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핀테크가 금융산업의 혁신을 새로이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 핀테크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글로벌 핀테크산업 진흥센터를 개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더해 20대 국회에 다시 재추진 예정인 규제프리존 법안에 부산지역의 금융관련 규제 완화를 추가하거나 금융위원회에서 추진중인 금융의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하여 부산지역을 오프라인 규제샌드박

스로 지정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과 부산시가 추진하는 문현-북항으로 이어지는 금융자유지역 설치 사업 및 기술창업-금융단지 연계형 핀테크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연계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규제프리존과 관련하여 살펴보자. 규제프리존은 기획재정부가 핵심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로 지역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여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하였고, 지난 19대 국회에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제출되었으나 임기만으로 폐기되어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모든 규제유형에 대한 상시적인 규제개선과 네거티브 규제개선 시스템을 통한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 여기에 부산시는 해양관광과 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를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부산의 지역전략산업으로 금융업이 포함되어 부산지역의 금융산업이 규제프리존의 혜택을 받도록 하였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따라서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산의 금융산업이 규제프리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다음에 소개하는 규제샌드박스 와 연계한다면 부산금융중심지가 도약하는 훌륭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규제샌드박스는 영국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가 새롭게 도입한 개념으로 금융산업의 혁신을 테스트하기 위한 안전지대를 의미한다(FCA, 2015)[20]. 여기에서는 금융회사들이 규제에 대한 부담없이 혁신적인 금융 상품을 시범 운영할 수 있고, 또한 규제당국도 금융혁신에 대한 사전적 대응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핀테크로 대표되는 금융혁신을 사전 테스트하는 공간으로 규제샌드박스가 활용될 것이 분명하다.

한편 핀테크 기업들의 서비스들은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활용되는 것들이 많으며,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또한 최근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서 활발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규제샌드박스 또한 온라인에 국한된 가상의 영역이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확장된 가상의 영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부산금융중심지가 규제샌드박스를 담당하면서,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으로 확장된 규제샌드박스를 함께 운영하도록 한다면 어떨까? 이는 금융혁신을 준비하는 핀테크 기업들의 부산 유치 또는 부산에서의 창업을 촉진하는 촉진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부산이 진정한 금융혁신을 선도하는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부산시가 추진하는 문현-북항으로 이어지는 금융자유지역과 기술창업-금융단지 연계형 핀테크 클러스터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로 구성한다면 이 아이디어는 충분히 실현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더해 규제프리존과 부산 금융중심지를 결합하고, 금융산업을 부산의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한다면 금융혁신을 준비하는 핀테크 기업들이 부산에서 설치된 규제샌드박스에서 혁신을 테스트하고, 다시 부산의 금융 규제프리존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중심지정책과 부산금융중심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앞으로 부산금융중심지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여러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정부의 금융중심지정책과 부산시의 부산금융중심지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고 부산금융중심지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한편 향후 금융중심지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문가 패널을 통한 설문조사나 계량적 평가방법 등을 활용한다면 더욱 다양한 정책적 제언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금융중심지정책은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부산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한 정책들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에서는 부산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확대나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먼저 부산금융중심지의 유치기업 인센티브 제도를 기업신설에만 국한하는 법률이나 제 규정들을 개정하여 기업이전에 대하여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유사 특별지구에서 제공하는 수준 이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금융기업들의 부산 이전을 촉진하여야만 금융중심지로서의 부산의 위상을 높이고 부산금융중심지의 성장을 위한 기틀이 다져질 것이다.

또한 최근 금융산업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핀테크, 클라우드펀딩과 같은 금융관련 동향에 부산금융중심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러한 금융관련 동향에 선도적으로 여러 사안들을 제기하고 부산금융중심지의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규제프리존이나 규제샌드박스과 같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과 부산시의 문현-북항 금융자유지역 및 핀테크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연계하면 국내의 핀테크 활성화와 부산금융중심지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이러한 여러 정책들의 최종 목표는 금융산업 관계자들이 부산 금융중심지에서 자리잡고 일하고 싶도록 만드는 것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이종필, “부산 금융중심지의 성공조건,” BDI포커스, 제99호, 2011.4.25.
- [2] 이종필, “금융중심지 조성정책과 부산의 대응방향,” 부산발전포럼, 2008 5/6.
- [3] 최진배, 윤창준, *금융중심지 도약을 위한 부산지역 금융 활성화 방안*, 한국은행 부산본부, 2011.
- [4] 조용범, *해외 사례로 본 부산 금융중심지 추진의 미비점 및 향후 과제*, 한국은행 부산본부, 2013.
- [5] 이연정, 이민환, 윤성민, “부산 원격지 금융백업센터 구축 타당성 연구,” 산업혁신연구, 제26권, 제2호, pp.123-151, 2010.
- [6] 김원익, 성순현, 이호선, “위기상황 하에서의 금융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책 제언: 부산 금융중심지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증권학회지, 제43권, 제1호, pp.279-304, 2014.

- [7] 부산대학교 사회급변현상연구소,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정책 재조명*, 부산경제진흥원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연구용역보고서, 2013.
- [8] 이종필, *부산의 금융클러스터 육성 방안*, 2015년 제1차 한국은행 부산본부 세미나, 2015.
- [9] 김성태, *금융클러스터 육성시 기대효과*, 2015년 제1차 한국은행 부산본부 세미나, 2015.
- [10] 자본시장연구원, *부산 금융중심지의 펀드산업(백오피스) 특화전략 연구*, 학술연구용역보고서, 2015.
- [11] 신동희, 김용문, “국내 재난관리 분야의 빅 데이터 활용 정책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5, No.2, pp.377-392, 2015.
- [12] 김태현, 박숙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개발과 관광정책의 역할,”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1, No.5, pp.403-412, 2011.
- [13] 김진해, “한국의 영상산업 클러스터 정책 - 영화영상 관련기관 부산 이전과 관련한 논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9, No.5, pp.128-136, 2009.
- [14]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14~2016)*, 보도자료, 2014.10.1.
- [15]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을 위한 연구*, 2013.
- [16]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부산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로드맵,” inside 부산금융 제1호, 2012.
- [17] 이종필,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기구 설립 방안*, 부산발전연구원, 2015.
- [18] http://www.bifc.kr/kor/sub02/sub02_02.asp
- [19] http://www.bjfez.go.kr/sub/01_02.asp
- [20] Financial Conduct Authority, *Regulatory sandbox*, 2015.11.

저 자 소 개

이 호 선(Ho-Sun Lee)

중신회원



• 2012년 3월 ~ 현재 : 부산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기업재무